

# 서전기전, 100% 무상증자

김한수 대표  
“주주이익 제고, 자본금 확대 목적”

서전기전(대표 김한수)이 보통주 1주당 신주 1주를 배정하는 무상증자를 단행한다. 코스닥에 상장한 전기 변환·공급·제어장치 제조업체 서전기전은 484만 9390주의 무상증자를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신주배정 기준일은 오는 25일, 신주 상장 예정일은 다음달 16일이다. 100% 무상증자 소식에 서전기전 주가는 급등하고 있다. 11일 오전 11시 현재 코스닥 시장에서 서전기전은 전 거래일 대비 26.8%(2010원) 오른 9510원에 거래되고 있다. 한때 상한가를 기록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김한수 서전기전 대표는 “주주이익을 제고하고, 중견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한 자본금 증액 등을 위해 무상증자를 결정했다”면서 “마곡 R&D센터 완공과 함께 자본역력이

생기면 신사업 투자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서전기전은 오는 11월 중 서울 강서구 마곡 산업단지에서 짓고 있는 R&D센터 완공해 핵심 연구개발부서와 지원부서들을 옮길 예정이다. 서전기전은 올 하반기와 내년 이후엔 해외기업과 대기업이 주를 이루고 있는 고압배전반 시장 진입을 목표로 설정했다. 이를 위해 고압개폐장치, 초고압개폐장치, DC 배전반, 정류기 등 새 제품 개발을 끝냈다. 국내에선 플랜트, SOC, 철도 및 한전 등 관수뿐 아니라 민수시장 확대를 위한 표준형 배전반을 개발해 판로를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김 대표는 “중장기 연구개발로드맵에 따라 제품 개발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면서 “로드맵이 차질없이 진행되면 현재 매출에서 2배 이상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송세준 기자 21ssj@

## 박정 의원

### “ESS화재, 성과만 추구한 결과...보급정책 재검토해야”



올해만 9건 발생한 ESS 화재사고의 원인이 ESS 보급 확대에 따른 부작용 때문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현재 보급 정책 방향을 다시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 을·사진)은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ESS가 재생에너지의 간헐성 보완 등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정책을 재설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정 의원은 최근 자주 발생한 ESS 화재 원인이 배터리 과충전, SW 작동 오류 등으로 밝혀졌는데 이는 수시로 방충전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016년부터 용복합시스템보급 사업으로 피크저감용 및 비상운전용 설치 시 30~50%를 지원하고 2017~2020년까지 한시적으로 ESS 요금특례제도로 충전요금 50%, 피크감축량에 따라 기본요금을 최대 3배까지 할인해주고 있다. 피크저감용 ESS는 설치 시 최대 50%의 할인을 받은 후 요금이 저렴한 경부하 시간대 충전을 해 충전요금을 할인받고, 요금이 비싼 피크 시간대에 사용해 사용요금 절감과 함께 피크감축량에 따른 기본요금할인까지 많은 혜택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이 박정 의원의 지적이다.

한국전력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5월까지 총 522억원의 ESS 할인이 있었다. 결국 양적 성과 달성을 위한 정책으로 기술개발이나 안전문제 준비가 부족한 상황에서 단기간에 설치가 급증했고 특례요금제 일몰 전 혜택을 보기 위해 ESS를 과도하게 이용해 요금을 절약하려는 수요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화재가 발생하게 됐다는 것이 박정 의원의 지적이다. 박정 의원은 “ESS의 본래 목적은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을 보완하는 등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을 촉진하는 것”이라며 “무리한 보급량 확대보다는 본래 목적에 맞게 사용될 수 있는 보급정책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박정 의원은 4년간 경부하 시간대 ESS 충전량이 20배로 증가했고, 그 혜택은 대기업으로 돌아갔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한전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경부하 시간대 ESS 충전량이 2015년 3488MWh에서 2018년 5월 6만 8568MWh로 20배 증가했다. 방전량은 2016년 5743MWh에서 2018년 5월 기준 5만 4118MWh로 10배가량 증가했다. 문제는 과거와 달리 현재는 경부하 시간대 수요가 공급을 넘어선 상황에서 경부하 시간대 충전 규모가 커지면 발전원가가 상승해 전기요금 인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전력이 업계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수권 기자 moonr@

### “스마트미터기 보급, 목표 대비 30%에 불과”

#### 중국과 일본에 비해 뒤쳐져 보급된 모델도 저기능 많아

우리나라 스마트미터 보급률이 목표치에 비해 너무 낮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또 이미 보급된 스마트미터도 저기능 모델이 주종을 이루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시을)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스마트미터기 보급률은 29%에 불과하고, 보급된 스마트미터기도 유효전력만 측정할 수 있는 저기능 모델이 주종을 이루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스마트미터기 보급률은 이웃 중국에 비해 41%p이고, 일본에 비해서도 20%p 정도가 더 낮았다. 또한 현재 우리나라에 보급된 스마트미터기는 총 6807대 정도가 되는데 그 사할별 분포를 보더라도 유효전력만 측정할 수 있는 E타입의 보급률이 68.5%에 달해 너무 성능이 떨어진 모델이 보급된 것이 아니냐는 게 박

정 의원의 지적이다. 게다가 정부는 2020년까지 총 2250만호에 스마트미터기를 보급한다는 계획을 세웠으나 2017년까지 680만호 보급에 그쳐 목표 대비 보급률은 30%밖에 달성하지 못했다. 정부의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남은 3년 동안 총 1570만호를 보급해야 되는 상황에서 질의 하락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스마트미터기는 동절기, 하절기 전기요금 폭탄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내가 선택한 요금제에 따라 사용한 양에 맞는 합리적 전기요금을 내도록 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권장되고 있으며, 합리적 수요관리를 통해 에너지절약에도 기여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박정 의원은 “전기요금의 합리적 부과를 위해 스마트미터기의 사용을 확대할 필요가 있지만 현재 보급률이 29%에 달하고 있는 것은 문제”라며 “그렇다고 정부가 목표달성만을 위해 질속으로 추진할 것이 아니라, 좀 더 세심하게 스마트미터기 보급을 챙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석희 기자 xxi@

# 서울반도체, 美 LED조명업체 상대 아크리치 관련 특허 소송 2건 승소

〈세계 최초 개발〉

서울반도체가 미국 LED 조명 아치펠라코 라이팅을 상대로 제기한 2건의 특허침해소송에서 모두 승소판결을 받았다. 서울반도체는 2017년 아치펠라코가 판매하는 필라멘트, 고전압용 LED 및 리니어 구동 드라이버 기술을 포함한 LED 전구들이 아크리치 특허 12개를 침해해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추가적으로 아치펠라코의 다른 LED 조명 제품에서 아크리치 특허 침해를 발견,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아치펠라코는 피소된 제품들의 특허 침해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물론 서울반도체 특허의 유효성에 대해 다투는 것을 포기했다. 또한, 향후 아크리치 기술 사용에 대한 로열티를 지불하기로 합의했다. 아크리치는 서울반도체가 세계 최초로 개발한 독자적인 기술이다. 이번 승소와 관련



서울반도체가 승소한 아크리치 기술 활용영역.

된 아크리치 특허들은 고전압(High Voltage) 구동 LED 드라이버 기술과 좁은 면적 안에 다수의 LED 칩을 집적시킬 수 있는 멀티 칩 실장 기술(MJT) 등이다. 사용된 LED 숫자가 줄어들수록 공간 활용도가 높아져 간단하게 회로를 디자인할 수 있고 전력 효율 20% 향

상 및 원가절감도 가능하다. 납기법 서울반도체 조명사업부 부사장은 “아크리치 특허 침해품의 유통을 막기 위한 단속 활동을 지속하는 한편, 아크리치 기술 사용에 대한 정당대가를 지불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조건의 라이선스 프로그램을 통해 기술 혁신 제품이 시장에 확산되도록 할 것”이라며 “청년들과 중소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서울반도체는 앞으로도 지식산을 존중하는 시장문화 구축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김승교 기자 kimsj@

## 국표원, KOLAS 시험·교정기관 체계 개편한다

오는 2020년 9월까지 780개에 달하는 국내 공인기관의 시험·교정 체계가 전면 개편된다. 국가기술표준원은 국내 시험성적서가 세계 어디서나 통용될 수 있도록 한국인정기구(KOLAS) 시험·교정기관의 체계를 개편한다고 11일 밝혔다.

KOLAS는 국제기준에 따라 시험·교정·검사기관의 역량을 국제적으로 공인하는 제도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검역원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 과정에서 유해물질을 발견했을 경우 미국 정부는 우리 검역원이 KOLAS 공인시험기관임을 확인, 이 결과를 신뢰하고 수용한다. 국표원은 “최근 개정된 국제표준에 따라 각

국의 인정기구는 2020년 11월까지 체계 전환을 완료해야 한다”며 “이때까지 체계 전환을 마친 시험·교정기관만이 KOLAS 성적서의 국제 통용성을 인정받게 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표원은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삼성전자 등 780개 KOLAS 공인기관(시험기관 552개·교정기관 228개)이 체계 전환을 원활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전환 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김승교 기자

# 오직 한빛케이블!

**전선 전문 유통기업 한빛케이블은**  
**고객이 원하는 다양한 제품을 가장 적절한 가격으로**  
**공급하고 고객 맞춤형 물류시스템 구축을 통한**  
**신속한 납기로 고객 불편 해소와 이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만족을 넘은 No.1으로 감동을 실현하는 한빛케이블.**  
**오직 한빛! 이라는 공감을 실현해가겠습니다.**

**취급대리점** LS 전선 · GAON 가온전선 · 각사 전선 취급

**주요취급품목** AS(HS), O.W, HIV(IEC 90°C), TFR-GVTFR-C/V, TFR-3, TFR-8, TFR-CVV, TFR-CVV-S, 6/10kV TFR-CV, 22.9kV CN/CV-W, 22.9kV FR-CNCO-W UTP

경기도 구리시 경춘북로 251번길 16(갈매동)  
**한빛케이블(주)** Tel : (031)571-6848~9  
 Fax : (031)571-8118

문의전화 (031)571-6848~9

**한빛캠페인** 한빛케이블(주)는 국민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 불법,불량전선을 취급하지 않습니다.